

# 학벌없는 세상이 온다

교육의향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당신은 고요 속에 갇혀 있다. 당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구치소 대기실, 손바닥만한 창을 통해 흔들거리는 무궁화 나무들을 숨죽여 지켜본다. 불췌 절망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하다. 시선을 넉넉하게 받아주던 공간에서 놀던 눈빛은 세 평짜리 삭막한 벽에 튀겨진다. 세상 구석까지 닿을 것 같던 힘은 반탄력으로 수축되어 구치소 방 한쪽으로 구겨지는 느낌이다.

당신은 좁아진 세상을 거부하려는 듯 최대한 느끼게 몸을 가누다 숨을 가늘게 내신다. 시간은 더욱 더디고 무심하게 흐른다. 문득 왼쪽 손바닥에 시선이 멈춘다. 당신은 대선 토론회 때 王(왕)자를 쓴 손을 흔들며 보였다. 흑자들은 무속에서 터 잡은 증거라 몰아세웠지만, 그것은 부적 따위가 아니었다. 당신은 왕의 피를 타고 났으며,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을 지엄한 왕권으로 누르듯 거부권을 어떻게든 휘둘렀으며, 헌법마저 짓겨 밟으려다 미끄러지지만 앓았다면 더 힘센 왕이 되었을 것이다.

손바닥 王자가 무에 중요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고시, 검찰총장. 당신은 이미 학벌과 엘리트의 카르텔 안에서 이미 왕처럼 있었다. 그런 당신은 선출된 권력까지 쥐었다. 학연, 지연, 인맥을 펼치던 육사, 경찰대, 서울대 출신 온갖 명문의 엘리트들은 당신의 왕국 안에서 이내 끈끈한 이해 공동체로 접속되었다. 세상은 당신을 무능력, 불통, 오만, 부

조리 등으로 수식하려 든다. 당신 탓에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비판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왕국의 언어로 우직하게 상상하고, 말하고, 행했을 뿐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3일, 당신이 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은 참 기괴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게다가 계엄에 대한 공분을 현재형으로 심어 놓은 영화 '서울의 봄'이 시사식을 휩쓴 직후이고, '소년이 온다'의 힘으로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기 직전이어서 당신의 계엄선포는 괴기스러운 축하행사나 음울한 전야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만큼 당신은 우둔하고 우직하다. 짓궂은 저질 코미디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뜨거운 계엄'은 잘못 베껴 쓴 것이라는 위헌 포고령으로, 특수부대가 총을 걸고 국회를 깨는 모습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옥죄었다.

하지만 당신은 괴물이 아니다. 아니, 당신만 괴물이 아니다. 국회에 총을 겨누고, 헌법을 몽개려는 모의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하수(下水)조차 끌어다 대고, 논리를 휘어대기에 여념이 없다.

계엄은 잘못이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나. 위헌이라도, 탄핵은 안 된다. 상황을 수습해야 하지만, 특검법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된다. 국격 훼손한 자를 엄벌하는 건 국격 훼손이다, 권한대행이니 할 일은 못하는 걸로 하고, 전임 하던 일은 그냥 하겠다, 열레리, 내란 혐의 뺏으니 탄핵도 무효다, 마음에 드는 영장만 따르겠다, 체포영장 있어도 불법이니 무단 침입이다, 공권력이 충돌하더라도 사이 좋게 해결하길 빌며 가만히 있겠다 등등.

자신의 이익만 셈하느라, 성찰의 언어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은 자들의 언어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뒤엉키며, 충돌한

다. 세상이 합리적인 법의 뿌리가 학벌주의의 정점에 있는 헛똑똑이들에 의해서 허망하게 세절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고통스럽다. 모두가 꿈꾸는 대학을 나와서 판사이고, 검사이고, 변호사인 자들의 법언어가 이토록 초라하고 영성하디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고시에 합격하거나, 힘있는 자리를 차지했을 때, 학교는 자랑스럽게 당신을 플래카드로 걸었을 것이다. 똑똑한 당신이 더 지혜롭고 명쾌하게 우리가 준 힘을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휘둘러 줄 것이라 믿었지만, 당신들의 성공은 무슨 수를 쓰든 이익이 되는 결과만이 '정답'이라 답해 온 결과가 아닌지 이제 세상은 의심하고 있다

22대 국회, 서울대 관련자 107석, SKY 학부 졸업자 128석, 법조인 출신 61석 역대 최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과잉 대표된, 똑똑한 당신들에 비례하여 행복이 증진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중이다. 이익에 따라 얼마든 똑똑해졌다가 기꺼이 멍청이가 될 수 있는 당신들 밖에서 내일을 찾을 것이다.

세상을 지키는 힘은 총칼 앞에서도 부릅뜬 눈에서, 점령지 앞 편의점 라면을 먹는 게으름에서, 신념까지 얼려버릴 날씨 속에서도 빛나는 응원봉에서, 언 속을 녹여주려 먼저 결제한 커피에서, 남태평양 트랙터에서, 은박지를 두르고 눈속을 지킨 키세스 시위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런 힘을 복돋는 쪽으로 우리 삶을 디자인하겠다고 깨닫는 중이다.

이제 세상은 평화롭게 손잡을 지혜를 찾는 길, 약한 생명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길, 세상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길, 헌법과 민주주의의 질서 위에서 성장하는 길을 찾아 걸을 것이다.

“이런 것거리들을 보고도 왜 감감한 데로 가아,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 학벌없는 세상이 온다.

社說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국가적 치욕이다

내란 등 전모 명명백백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과 함께 반복된 절차 불응에 따른 개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지만 국가적 치욕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도 한없이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길 촉구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공소장에 '헌법상의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사법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고위간부 9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되레 법 위에 군림하려던 태도도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당장 그는 탄핵 심판 서류를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겁한 모습으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겼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그는 탄핵반대 시위대에 메시지를 내며 국유 세력 집결을 선동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다. 자신의 말대로 수사와 탄핵심판에 정당하게 임하는 커녕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한때 국가 지도자였다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관계 당국은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내란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정치권도 한마음으로 내란 사태가 하루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 비극 반복 않도록 안전 사회 만들어야

18일 제주항공 합동추모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정부 합동추모식이 지난 18일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폭발해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지 21일 만이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게요'를 주제로 열린 합동추모식은 눈물바다였다. 유가족들의 시간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에 멈춰 선 채 상실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참사를 지켜본 국민 모두에게도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 유족들은 이날 추모식에서 눈물을 삼키며 정부를 향해 참사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희생자들의 한을 풀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다.

정부도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관련법안 발의 등을 통해 유족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구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성심을 다하겠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의 반사회적 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통해 또 다시 항공 안전을 경시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 등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픔과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길이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인스타그램 |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jnilbo.com

### 서석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정의(正義)'를 가장 깊이 다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정의를 '각 계층이 제 역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들이 분열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통치 및 수호 계층에 대한 엄격한 사회 제도와 규범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자원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으로 능력, 공로, 필요 등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분쟁, 불법 등의 행위로 균형이 깨졌을 때 법과 재판 등을 통해 원래 상태로 교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국가적 이상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제도에 기반해 정의에 대한 정의를 달리했으나 양 쪽 모두 어떠한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하려면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직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의가 깨질 경우 법적 기능을 통해 이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양 철학자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한 공동체에서의 '정의 실현'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든 법적 절차를 거쳐 불법이 인정되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

### 국가와 국민의 '정의'를 위해

윤 대통령은 그 동안 관저에 숨어 '신변 안전' 등을 핑계로 소환에 불응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였다. 계엄 해제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8일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에 동조한 공범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인 만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면책 특권 등이 있어선 안 된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구속 이후의 상황에도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야 할 이유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